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http://sri.kostat.go.kr>

2021



통계청

통계개발원

범죄·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최근 10년간 교통범죄 등 특별법범죄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였다. 반면 성폭력범죄의 증가로 강력범죄가 늘어나 형법범죄는 증가하였다. 2018년과 2019년 재산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아동대상 범죄 중에서 아동살인을 제외한 아동 실종·가출,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아동유괴 모두 최근 5년간 발생률이 증가하여, 우리사회의 아동 대상 범죄 위험수준이 높아졌다.
- 최근 20년간 사고, 자살, 타살 등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모든 연령대의 외인 사망률이 감소하였고, 여성에 비하여 남성 외인 사망률의 감소폭이 크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층의 외인 사망률과 자살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2006년 이후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손실은 크게 줄었다.
- 2010년 이후 매년 약 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건축물의 재산가치 증가로 인해 재산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 지난 10여 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일반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 및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향상되었다.

안전은 크게 사회적 안전과 자연재난, 인적 사고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적 안전은 집단 내 규범이나 인간관계, 사회체제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주로 범죄와 테러 등이 있으며, 이 글에서는 범죄의 발생 현황과 범죄피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물적 또는 인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말한다. 지진, 산사태, 황사, 태풍, 호우 및 폭설 등의 자연현상이나 메르스, 조류독감과 같은 감염병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다루었다. 인적 사고는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결과로 나타난다. 화재, 교통사고 등과 같이, 시설물, 설비, 기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인간이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하는 사고, 화학물질이나 에너지에 의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는 사고로 인한 사망, 화재, 교통 사고를 주로 살펴보았다.

한편, 범죄와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찰력과 소방력도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관과 소방관 인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확인해 보았다.



범죄(사회적 안전)

범죄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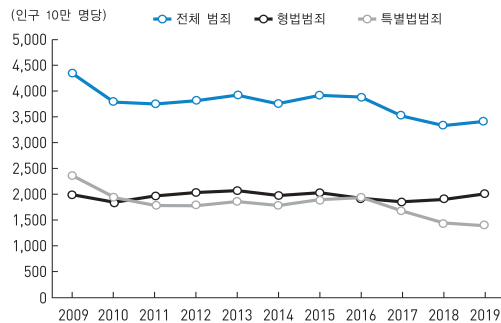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로 나타내는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0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3,796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 3,354건으로 최근 2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19년에는 3,409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전체 범죄는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방화, 절도, 사기, 배임, 위조 등의 형법범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범죄로 구성된다. 전체 범죄의 감소현상은 특별법범죄의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2010년을 분기점으로 이전에는 특별법범죄 발생률이 형법범죄 발생률보다 높으나, 2011년부터는 형법범죄 발생률이 특별법범죄 발생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형법범죄 발생률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 인구 10만 명당 1,859건에서 2019년 2,009건으로 늘었다. 반면 특별법범죄 발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2017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2010년 인구 10만 명당 1,936건에서 2019년 1,401건으로 줄었다(그림 X-1).

2019년을 기준으로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76만 7,684건으로 전체

범죄는 발생 건수 면에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간 18.5% 감소하였다. 형법 범죄는 104만 1,395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5.4% 증가한데 비해, 특별법범죄는 72만 6,289건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하였다(그림 X-1).

[그림 X-1]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0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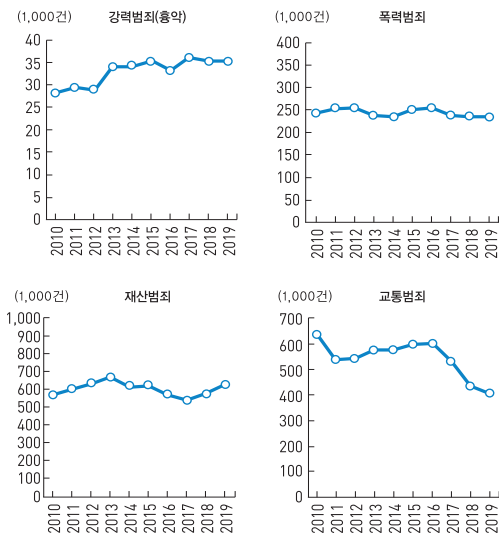
주: 1) 범죄율=해당 범죄 발생 건수÷주민등록인구×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강력, 폭력, 재산, 교통범죄 등 범죄유형에 따라서도 범죄발생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강력범죄(흉악)의 증가와 교통범죄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강력범죄(흉악)는 2010년 2만 8,134건에서 2019년 3만 5,066건으로 최근 10년간 24.6% 증가한 반면, 교통범죄는 같은 기간 동안 63만 7,790건에서 40만 6,023건으로 36.3% 감소하였다.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는 상대적으로 소폭의 증감현상이 나타났는데, 재산범죄는 2010년 56만 8,759건에서 2019년 62만 7,430건으로 10.3% 증가한 반면, 폭력범죄는 같은 기간에 24만 2,770건에서 23만 2,316건으로 4.3% 감소하였다(그림 X-2).



2019년을 기준으로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유일하게 재산범죄만 8.8% 증가하였고, 교통범죄는 6.3% 감소하고, 폭력범죄와 강력(흉악)범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2013년 이래 감소 추세이던 재산범죄가 2018년과 2019년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전체 형법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X-2]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 건수, 2010-2019



- 주: 1) 강력범죄(흉악)는 형법범죄 중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범죄 등을 포함함.
 2) 폭력범죄는 형법범죄 중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악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범죄 등을 포함함.
 3) 재산범죄는 형법범죄 중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죄 등을 포함함.
 4)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 위반범죄와 교통방해죄를 포함함.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에 속하는 주요 죄명에는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범죄

가 있다. <표 X-1>에서처럼 죄명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나타난 전체 강력범죄 증가현상의 원인이 성폭력범죄의 증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살인범죄와 강도범죄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폭행·상해 범죄와 방화범죄 역시 완만한 등락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강도를 제외한 4개 범죄유형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그간 증가추세였던 성폭력범죄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X-1> 주요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별 발생 건수, 2010-2019

연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
2010	1,262	4,402	20,584	1,886	224,300
2011	1,221	4,021	22,168	1,972	232,229
2012	1,022	2,626	23,376	1,882	230,635
2013	959	2,001	29,097	1,730	219,805
2014	938	1,618	29,863	1,707	214,605
2015	958	1,472	31,063	1,646	226,543
2016	948	1,181	29,357	1,477	228,710
2017	858	990	32,824	1,358	215,717
2018	849	841	32,104	1,478	208,935
2019	847	845	32,029	1,345	203,074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아동 대상 범죄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아동 대상 범죄 혹은 위험요인 유형으로는 아동실종·가출, 아동유괴,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아동살인 등이 있다.



〈표 X-2〉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5년간 (2015-2019년) 발생 건수 면에서 아동성폭력과 아동살인은 감소하였지만, 아동학대와 아동유괴, 아동실종·가출은 증가하였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증가폭이 커서 지난 5년간 1만 1,715건에서 3만 45건으로 약 156.5% 늘었고,

아동유괴 역시 133건에서 197건으로 48.1% 증가했으며, 아동실종·가출은 1만 9,428건에서 2만 1,551건으로 10.9% 늘었다. 반면 아동살인은 발생 건수가 가장 적은 범죄로 2015년까지는 70-80건 발생하였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47건까지 줄었고(36.5% 감소), 아동성폭력은 9,025건에서 8,484건으로 6.0% 감소하였다.

〈표 X-2〉 아동 대상 범죄별 발생 건수와 발생률, 2015-2019

연도	아동 실종·가출	아동 학대	아동 성폭력	아동 유괴	아동 살인
발생 건수(건)					
2015	19,428	11,715	9,025	133	74
2016	19,870	18,700	8,573	140	66
2017	19,956	22,367	9,349	166	59
2018	21,980	24,604	8,591	149	52
2019	21,551	30,045	8,484	197	47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2015	216.8	130.7	81.8	1.2	0.7
2016	227.4	214.1	79.9	1.3	0.6
2017	235.3	263.7	89.8	1.6	0.6
2018	268.8	300.9	85.3	1.5	0.5
2019	271.8	378.9	87.1	2.0	0.5

주: 1) 아동성폭력, 아동유괴, 아동살인 등은 20세 이하 피해자, 아동실종·가출, 아동학대는 18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2)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아동학대사례로 분류된 아동학대사례 건수를 의미함.
 3) 아동유괴 발생 건수는 약취, 유인, 수수, 은닉, 부녀매매, 국외이송, 인신매매 중 20세 이하 피해자 수임.
 4) 아동성폭력 발생 건수는 범죄분석 개요부분의 수치 사용. 강간, 간음, 강제추행, 강간등, 강간등살인, 치사, 상해, 치상, 특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 추행 중 20세 이하 피해자 수임.
 5) 아동살인 발생 건수는 살인(기수), 살인(미수, 예비, 음모, 방조) 중 20세 이하 피해자 수임, 치사 제외.
 6) 발생률=(해당 범죄 발생 건수÷해당 연령 주민등록인구)×100,000.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2-2018.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주요통계」, 202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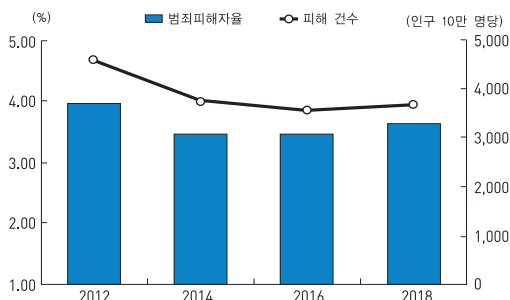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수준은 단순히 발생 건수보다는 아동인구에 대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아동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경우 아동인구를 고려한 발생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동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발생 건수가 소폭 감소한 아동성폭력의 경우 발생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아동살인을 제외한 아동실종·가출,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아동유괴 모두 아동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는 2015년에 비하여 2019년 증가한 셈이다. 우리 사회의 아동대상 범죄 위험수준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아동학대는 아동인구 10만 명당 378.9건, 아동실종·가출은 271.8건, 아동성폭력은 87.1건, 아동유괴는 2.0건, 아동살인은 0.5건 발생하였다.

범죄피해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이 집계하는 범죄발생통계를 공식범죄통계라 하며, 국가간 비교나 시계열 분석을 할 때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된다. 다만 공식범죄통계로는 신고되

지 않은 범죄 즉 ‘숨은 범죄(hidden crimes)’를 파악할 수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피해 통계를 수집하고, 범죄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2년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직전 연도의 범죄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건수는 2012년 4,600건이었다가, 2014년 3,743건, 2016년 3,556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 3,678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범죄피해자 비율 역시 유사한 추이를 보여서, 2012년 3.98%에서 2014년과 2016년에는 3.46%로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3.68%로 소폭 증가하였다(그림 X-3).

[그림 X-3] 범죄피해 경험률, 201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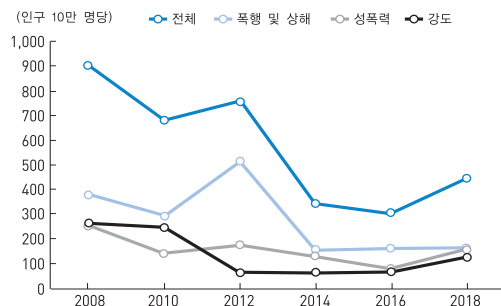
주: 1) 범죄피해 건수 기준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행,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 대상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 건수임.
2) 범죄피해자 비율은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행,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 대상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이 중 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2008년 조사 시 인구 10만 명당 899건이었으나, 이후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다만 2018년 조사에서는 447건으로 증가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범죄유형인 폭행 및 상해(협박, 괴롭힘 포함) 피해건수는 2012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 피해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 2018년을 기준으로 폭행 및 상해범죄와 성폭력범죄 피해건수는 각각 인구 10만 명당 161건이며, 강도범죄 피해 건수는 125건이다(그림 X-4).

형사사법기관에 신고 혹은 인지된 성폭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표 X-1), 범죄피해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피해 건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어(그림 X-4), 최근 나타나는 성폭력범죄 발생률의 증가 현상은 실제 발생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신고율의 증가로 숨은 범죄가 감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X-4]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률, 2008-2018



주: 1) 폭력범죄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폭행(협박 포함) 및 상해, 성폭력, 강도 등 개인 대상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 건수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인적사고 및 자연재난

사고로 인한 사망(외인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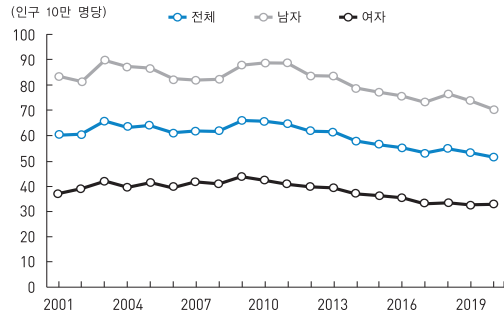
최근 20년간 사고, 자살, 타살 등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2001년 인구 10만 명당 60.3명에서 2020년 51.5명으로 14.6% 줄었다. 2003년 증가한 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1년 이후 다시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인 사망률은 모든 사고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고, 이는 남성이 경제활동과 사고위험이 높은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남성 외인 사망률의 감소폭이 여성보다 커서, 남성 외인 사망률은 2001년 83.5명에서 2020년 70.4명으로 15.7% 감소한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37.0명에서 32.7명으로 11.6% 감소하였다.

2020년을 기준으로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외인 사망률은 2019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성별로 보면 남성의 외인 사망률은 70.4명으로 전년도 73.8명보다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32.7명으로 전년도 32.6명과 유사한 수준이다(그림 X-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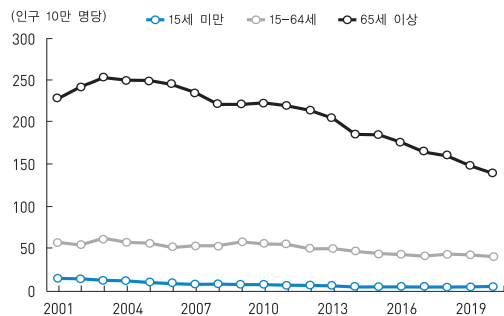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보면 최근 20년간 모든 연령대의 외인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5세 미만의 외인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선진국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5명 이하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3.9명으로 최근 30여년간 최저치를 나타냈다. 15-64세의 경제활동 인구의 외인 사망률도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으

[그림 X-5] 성별 외인 사망률, 2001-2020



주: 1) 외인 사망률=인체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그림 X-6] 연령집단별 외인 사망률, 200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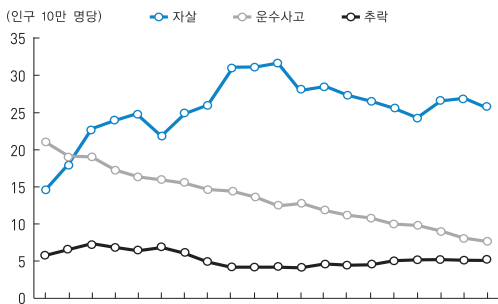
주: 1) 외인 사망률=해당 연령집단 인체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해당 연령집단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며, 2020년 기준 40.5명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외인 사망률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03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는데, 감소폭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크기는 하나, 2020년 현재도 인구 10만 명당 138.7명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그림 X-6).

지난 20년간 외인 사망의 주요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그리고 추락이었다. 자살률은 매년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인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운수사고 사망률은 1995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감소폭이 가장 크다. 추락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6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3년 이후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0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7명으로 전년 26.9명에 비해 감소하였고, 운수사고도 8.2명에서 7.7명으로 감소하였다. 추락사고는 인구 10만 명당 5.2명으로 2017년 이후 발생비가 변화하지 않고 동일하다(그림 X-7).

[그림 X-7] 주요 외인별 사망률, 2001-2020



주: 1) 사망률=해당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자연재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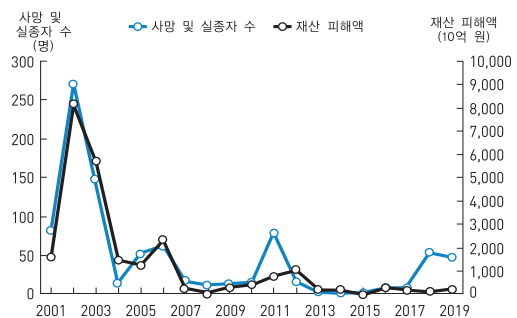
지난 20년간 자연재해는 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했다.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모두 한반도 내륙에 초대형 태풍이 지나갔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그리고 2006년 에위니아 등의 초대형 태풍은 수조 원의 재산피해와 대규모 인명손실을 초래하였다.

2006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손실은 크게 줄었으며, 최근 3년간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저류지 확대, 배수로 확보 및 산사태 방지 등 자연재해 대비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9년에 사망 및 실종자 수는 2018년 53명에서 48명으로 감소한 반면, 재산 피해액은 2018년 1,410억 원에서 2,16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그림 X-8).

[그림 X-8]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2001-2019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각 연도.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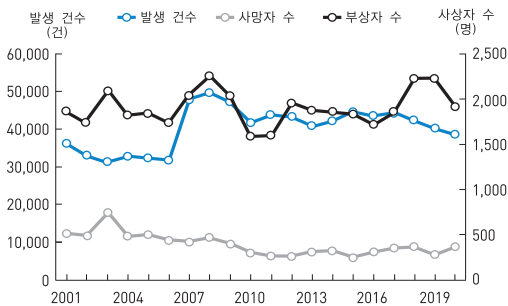
화재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적 재난이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높다. 화재 발생 건수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1년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새로운



국가화재분류체계의 도입으로 임야 및 가스폭발 화재가 화재 통계에 포함됨에 따라, 2007년부터 발생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2010년 이후 매년 약 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긴 하나, 2020년 3만 건대로 감소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3년의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화재 초기 진압률이 높고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와 이송 및 치료 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꾸준히 감소하던 화재 사망자 수는 2010년 이후 약 3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800명 내외 수준을 보였다. 다만, 2018년과 2019년 부상자 수가 전년 대비 2,000명대로 증가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고 2021년에는 소폭 감소하고 있다.

[그림 X-9] 화재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200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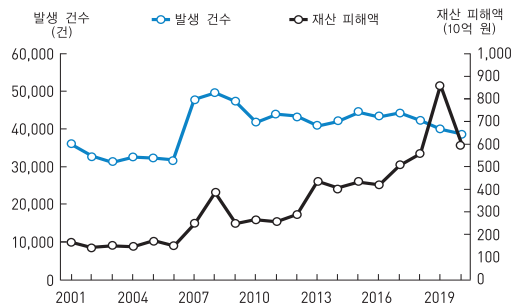
출처: 소방청, 「화재통계연보」, 각 연도.

2020년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의 증가 현상이 두드러진다. 화재 발생 건수(38,659건)가 전년 대비 3.6% 감소하였고, 부상자 수(1,917명)는 14.0%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365명)는 28.1%나 증가하였다(그림 X-9).

지난 20년간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8년부터 화재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피해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 증가가 더 큰 것은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되고 건축물의 재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도의 경우 화재 발생 건수(3만 8,659건)는 전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재산 피해액(6,005억 원)은 전년 대비 30.1% 감소하였다. 특히 재산 피해액은 2019년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20년 크게 감소하여, 이 전년도의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X-10).

[그림 X-10] 화재 발생 건수와 재산 피해액, 2001-2020



출처: 소방청, 「화재통계연보」, 각 연도.

교통사고

지난 10여 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특히 2015년과 2019년 증가폭이 크다. 반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사고 발생 건수 역시 2015년과 2019년 증가하는 등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이는 도로사고 부상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경향과 대조적이다. 철도사고는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양사고는 2007년 이후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07년부터 약간 증가하다가 2011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다만,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만 2,882건으로 전년 23만 2,654건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도로사고와 철도사고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사망자 수 역시 도로사고와 철도사고 사망자 수의 감소로 3,491명에서 3,237명으로 줄었다. 해양사고는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증가하였다(그림 X-11).

경찰력 및 소방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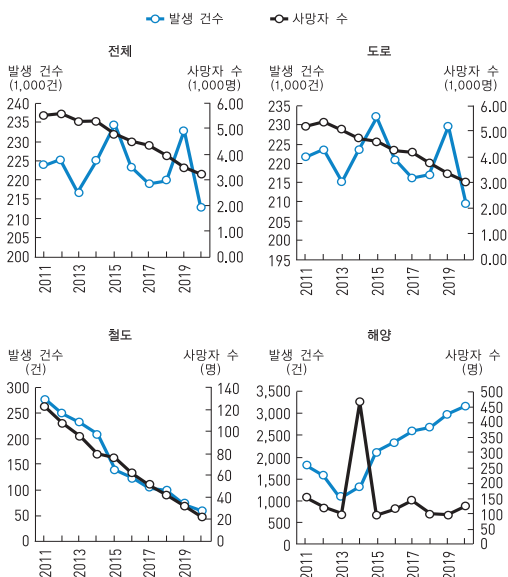
최근 15년 동안 경찰관과 소방관 정원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담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경찰관 수는 2005년 9만 5,336명에서 2019년 12만 2,913명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505명에서 421명으로 감소하였다.

소방관 수는 2005년 2만 9,362명에서 2019년 5만 6,647명으로 증가하여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1,641명에서 913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표 X-3).

안전에 대한 인식

일반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표 X-4〉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인 사회안

[그림 X-11]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2011~2020



주: 1) 전체 교통사고 통계의 경우 항공사고 통계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2021.



〈표 X-3〉 경찰관 및 소방관 수, 2005-2019

연도	경찰관		소방관	
	정원 수	1인당 담당 인구	정원 수	1인당 담당 인구
2005	95,336	505	29,362	1,641
2006	95,613	507	30,199	1,604
2007	96,324	505	30,630	1,589
2008	97,732	502	31,918	1,537
2009	99,554	495	33,992	1,451
2010	101,108	490	36,711	1,350
2011	101,239	493	37,826	1,320
2012	102,386	490	38,557	1,302
2013	105,357	479	39,519	1,276
2014	109,364	464	40,406	1,256
2015	113,077	451	42,634	1,197
2016	114,658	447	44,121	1,161
2017	116,584	441	48,042	1,069
2018	118,651	435	52,245	988
2019	122,913	421	56,647	913

주: 1)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추계인구÷경찰관 정원 수.
 2)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추계인구÷소방관 정원 수.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
 소방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표 X-4〉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10-2020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전반적인 사회안전	11.3	13.7	9.5	13.2	20.5	31.8
자연재해	18.8	23.3	15.1	20.8	22.7	37.0
교통사고	8.0	9.4	7.3	10.2	13.1	21.7
화재	16.6	17.7	14.2	19.1	20.9	24.2
범죄위험(치안)	8.2	9.1	8.9	9.2	17.2	26.8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3세 이상) 중 해당 분야의 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단, 2010년 자료의 경우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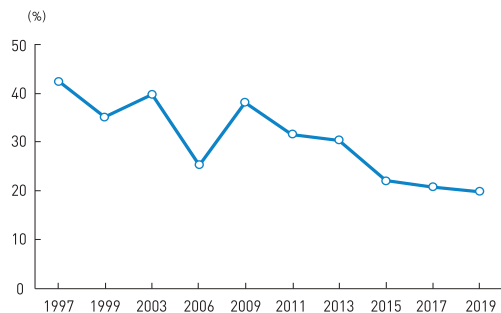
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0년 11.3%에 불과했으나, 2014년 9.5%로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2020년 31.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자연재

해, 교통사고, 화재 및 범죄위험(치안) 영역 모두에서 나타난다. 특히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8.2%p, 범죄안전은 18.6%p 증가하였고, 화재안전의 경우 증가폭이 7.6%p로 가장 낮다.

안전에 대한 인식은 조사 시점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조사 시점마다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전반적으로 2014년에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및 범죄위험까지 전 영역에 걸쳐 안전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짐작되며, 이후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현상과 함께, 일반 국민들의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역시 감소하고 있다. [그림 X-12]

[그림 X-12]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1997-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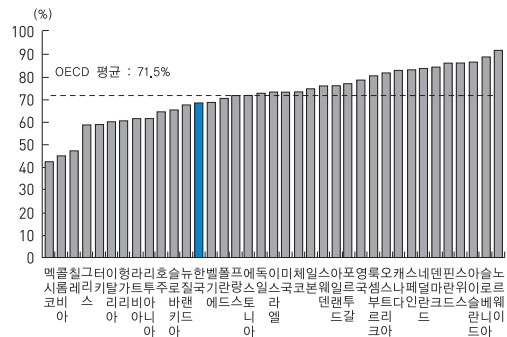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4세 이상) 중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13년부터 표준화가중치가 적용된 수치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1997-2006; 「전국범죄피해조사」, 2009-2019.

에서 보면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997년에는 42.4%, 2009년에는 37.9%에 이르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에는 19.8%로 나타났다. 지난 20여 년간 소폭의 등락 현상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두려움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2011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의 야간보행안전도('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는 2018년에 68.4%로 OECD 평균인 71.5%와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은 노르웨이(91.2%), 슬로베니아(88.3%), 아이슬란드(86.2%), 스위스(85.9%) 등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고, 멕시코(42.5%), 칠레

(47.0%), 이탈리아(59.9%), 헝가리(60.3%) 등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그림 X-13).

[그림 X-13] OECD 국가의 야간보행안전도, 2018



주: 1) 야간보행안전도는 각 국 조사대상자(15세 이상) 중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OECD,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2020.